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인천 이어 두 번째, 경남까지 확대

- 경상남도 광역지방정부 단위 초기보호체계 모델 마련, 8월 중 사업 착수 -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화)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지방정부로 경상남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지역은 인천광역시('25.7.~)를 포함해 2개 시도로 확대된다.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은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보호 등)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으로 공식 결정되기 전까지 초기보호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 심리 회복, 중장기 보호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나, 그간 필요한 지원이 시·군·구 자원 위주로 이루어져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를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지방정부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초기보호아동*이 심리검사와 트라우마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0~17세 보호대상아동은 전체 약 2.1만 명이고, 매년 약 2천 명 발생 ('25년 1,975명)

* 인천광역시 '26년 상반기(1~6월) 발생한 초기보호아동 71명 전원에 서비스 제공

원가정 회복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형 보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에 이어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광역 지방정부 한 곳을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하였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경상남도를 최종 선정하였다. 경상남도는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기보호기간은 원가정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자 아동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동안 지역 여건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보호단계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든 초기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원가정 회복 지원, 최선의 가정형 보호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박찬수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044-202-3441)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원가정 분리 직후부터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시군구별 초기보호 지원 역량 격차 및 시군구 자원에 한정된 자원 검토 한계
-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시보호조치 된 아동
- (추진경과) 1개소 (인천, '25.7.~) 기운영, 추가 1개소 선정 (경남, '26.8~)
- (사업내용) 광역 전담팀(3인)에서 관내 보호자원 상시 모니터링 및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지원, 초기보호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및 심리검사·조기치료 연계·제공
- (참여기관 지원) ①운영지원비 + ②인센티브 + ③프로그램 지원비
 - (세부내역) ①행정·임상심리상담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②아동치료재활 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③검진비 및 심리상담 치료비

□ 공모 절차

- (6.16.~7.13.)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6.15.)
- (7월 2~4주) 참여기관 선정 심사
- (8월 중) 선정기관 공표 및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 착수